

‘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부도 막는다

법무부 보고

법무부의 새해 주요 업무 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법질서 훼손 및 부정부과 등 불법행위는 엄하게 다스리면서도 서민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정책도 투자 유치를 꾀하는 동시에 지문체취 등을 통해 불법체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법질서 확립은 ‘기본’= 국가정책성 확보를 위해 공안조직과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며 청소년 헌법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분야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당법 집행법을 인권단점으로 왜곡하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등 실효성 있는 민사제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범죄 근절 차원에서 서

부동산 등 신탁자산 기초로 수익증권 발행 허용

범죄 피해자 구조금 확대... 해외 인재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울중앙지검 전산 전문직원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선플’달기 운동본부 및 주요 포털사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생안정 지원= 불법 사금융 등 5대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등 검찰권 행사의 초점을 서민을 돌보는데 맞추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서민생계형 범죄는 범행 배경과 피해액 등을 따져 벌금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줄기로 했다.

최고기 수입과 사료 값 폭등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축사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50두 이상 전업 축산농가 400가구의 1천500여 개방형 축사를 새로 등기 대상에 넣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 요건을 국민 100명 이상 고용에서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도산법·신탁법을 개정해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대 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적극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신탁자산으로부터 생길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게 증권화를 허용하는 등 1961년 제정 이후 손질하지 않은 신탁법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함으로써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패 근절범죄피해 지원 강화= 국가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등에 맞서 유관기관과 ‘합동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활용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품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즉 플리바게닝(형량협상)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고 환수 대상 범죄의 범위를 형상 배임수재죄, 환경범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법무부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사망 1천만원, 중상해 600만원으로 18년간 동결돼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5년 내 최고 1억 원, 2009년에는 최고 3천만원까지 늘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지급 요건도 완화해 피해자 구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56개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형사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불법체류 입단=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고 단순 노무 인력은 일정기간 이상의 체류를 막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효율적 사회통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도 완화해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최우수 외국 인재를 제한된 범위에서 이중국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출생·해외입양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과학·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최우수 인재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병역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제화에 선전적 이중국적자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지문체취 제도를 부활시켜 불법체류 외국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지문체취 제도를 부활시켜 불법체류 외국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음부즈맨·이동 신문고 운영

현장 찾아 고충 해소... 경제 살리기 지원 강화

국민권익위 보고

기업으로 상황을 전담하는 기업음부즈맨 제도와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음부즈맨을 운영하고,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

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전담민원 창구를 내년 2월부터 운영하고 외국 경제단체와 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경제 정책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8개 지역상담센터에 법무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서민밀착형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연합뉴스

‘공안부활·인터넷 감시·플리바게닝’ 논란 일 듯

법무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법무부 보고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세부 추진사항의 경우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공안조직 대폭 강화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인터넷 범죄 수사 기구 확대도 사이버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공안 인력과 조직, 예산을 복원하는 한편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진보진영 시민사회 단체와 야권의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 공안 기능 강화가 과거 정권처럼 표현과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품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는 피의자 쪽에 가까운 참고인 제3자 범행을 증언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준다는 점에서 피의자 자백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와 사실상 다르지 않기 때문.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찬반이 갈린다.

법무부는 검찰의 전산·방송통신직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인력을 늘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영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와 함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시 신임 실·국장 프로필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정확한 판단과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강진(56) ▲경기도, 연세대 행정대학원 ▲투자협력관 ▲관광체육국장 ▲환경녹지국장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합리적인 업무 추진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둑하다. ▲장흥(52) ▲전남대 행정대학원 ▲기획관 ▲남구부구청장 ▲문화체육정책 실장 ▲도시철도건설 본부장



김동률 정책기획관

책임감과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성(57) ▲단국대 행정대학원 ▲행정부 인사계장 ▲서구부구청장 ▲종합건설본부장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꼼꼼한 일처리로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외유내강형’. ▲곡성(55) ▲전남대 행정대학원 ▲통신협력과장 ▲경제통상과장 ▲투자유치기획단장 ▲감사관



이우현 비엔날레사무국장

후배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덕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53) ▲조선대 ▲행정자치부 조정담당 ▲광주시의회 총무담당관 ▲투자협력관 ▲동구 부구청장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 추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보성(56) ▲조선대 산업대학원 ▲건설지원과 건축지원 2계장 ▲건축주택과장



홍기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차분하고 섬세한 스타일이며, 업무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함평(56) ▲조선대 대학원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과장



문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합리적이란 평. ▲화순(57) ▲성안관대 ▲환경녹지국장 ▲도시교통국장 ▲공무원 교육원장 ▲남구부구청장



‘盧 前대통령에 15억원’

검, 박연차 차용증 확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준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앞서 국제성이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차용증을 확보한 뒤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압수물과 함께 이 차용증을 넘겼다는 것이다.

차용증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날짜로 작성돼 있으며 상한기간(1년)과 이월까지 정확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 부터 15억원을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퇴임 이후인데도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뇌물수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법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돈의 명목이나 대가성은 물론 차용증의 진위나 신빙성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 등 관계인의 진술이나 계좌추적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이 건네진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AFA 시애틀의 최첨단 WERVE CHAIR

“연예 어디서든 조이케젤만 있으면 괴로는 확 물어집니다.”

조이케젤 SF-01

042)368-3200 1688-1471 02-487-8256